

이덕일의 '역사의 창'



붕당과 진영

고대에는 정치적 목적의 당(黨)을 만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다. 사대부 계급이 집단적으로 조정에 진출한 북송(北宋) 때부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들)처럼 여기지만 자기 당이 아니면 모두 이와 반대로 한다. 당시 백성들에게 공납(貢納)은 큰 고통이었다.

이익은 '귀향(歸鄉)'에서 "지금 세상에 붕당의 화(禍)도 그 근원을 따지면 벼슬하려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당쟁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가 진영(陣營)인데, 진영이란 원래 군대가 집결하고 있는 곳을 뜻한다.

추거자(推車子)라는 말이 있다. 수레를 미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상하가 서로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성공(成公) 2년' 조에는 서기 전 589년 제(齊)나라와 진(晉)나라가 제나라 부근의 안(鞍) 땅에서 진영을 치고 서로 전쟁하던 때의 이야기가 나온다.

의 영수였지만 백성들의 민생을 걱정하는 처방은 같았다. 당시 백성들에게 공납(貢納)은 큰 고통이었다. 공납은 그 지방의 특산물을 임금에게 바친다는 소박한 개념에서 시작했지만 그 부과 단위가 가호(家戶) 단위라는 점이 문제였다.

또한 가짓수도 많았다. 이이는 그 부과 단위를 가호가 아니라 농지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바꾸고 잡다한 가짓수를 쌀로 통일하자는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제안했고, 류성룡은 임진왜란 때 작미법(作米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실행에 옮겼다.

지난 7월 17일-18일 NBS의 정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힘 30%, 더불어민주당 23%, 지지정당 없음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야 양당이 모두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요즘 정치 수준에 이이나 류성룡을 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인지 몰라도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큰 정치를 보고 싶은 마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시력검사표의 역사와 발달



마양래 보리안과병원 원장

이후 1862년 네덜란드 안과 의사 '허먼 스넬렌'이 가로 다섯 칸, 세로 다섯 칸 격자 안에 들어가는 도형 또는 문자체를 발명해 시력측정에 사용하면서 표준화된 시력검사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은 시력검사표의 기호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시력인데도 모양이 헷갈려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것들로 엄선된 것이다. 이밖에 현재는 1997년 안과 의사 진용환 박사가 개발한 '진용환 시력표'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력검사표는 0.1에서 2.0까지의 시력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최고 시력은 2.0인 걸까? 그렇지 않다. 흔히 시력이 좋다고 알려진 몽골인들은 넓은 초원에서 멀리 보는 생활을 하는 환경 덕분인지, 시력을 측정해 본 결과 평균 시력이 3.0으로 나왔고, 심지어는 8.0이라는 놀라운 측정 결과가 나온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시력검사표의 최고 값이 2.0까지만 나와 있는 것은 시력검사의 목적이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한 시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낮은 시력을 교정하기 위함으로 그 이상의 시력을 측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시력검사표의 역사,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안과에서는 혁명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만큼, 안과 치료와 시력 보조도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꼭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해보는 시력검사. 다음 시력검사를 받을 때는 시력검사표에 숨겨진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눈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은 어떨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시력검사표를 이용해 시력을 측정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럼 안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력 검사에 이용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숙한 시력검사표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달했을까.

시력검사표가 발달하기 전, 옛날 사람들은 별을 이용해 시력을 측정했다. 7개의 밝은 별이 국자 모양을 하고 있는 북두칠성 별자리를 자세히 보면, 끝에서 두 번째에 쌍둥이별이 있다. 이 두 개의 별이 선명하게 두 개로 보이면 시력이 좋고, 한 개로 보인다면 시력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반면 시간이 흘러 오늘날 우리는 시력검사표를 이용해 시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시력검사표의 시작은 1843년 독일의 안과 의사 '하인리히 퀴를러'가 시력 검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검사자가 외울 필요없는 읽는 차트를 만들게 되면서이다.

란돌트 고리는 쉽게 말하면 'C'자 모양의 구멍 뚫린 원이다. C자 모양으로 시력을 잴 수 있는 비밀은 고리의 트인 곳에 숨어 있다. 이 고리를 5m 떨어진 거리에서 볼 경우, 시력이 좋은 사람은 기호의 트인 곳을 뚜렷하게 인식해 고리 모양으로 보는 반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트인 부분이 보이지 않아 단순히 원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원리이다. 이처럼 어느 방향이 뚫려있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어린이나 문맹자도 시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1951년 최초의 시력표가 발명되었다. 국내 최초로 발명된 '한천석 시력표'에는 란돌트 고리와 더불어 숫자와 한글 기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 시력 검사표는 숫자 2부터 7까지 6개의 숫자와 일곱 개의 한글, 일곱 개의 그림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

8월 18일 '쌀의 날' 을 아십니까

표한 '2022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으로 10년 전인 2013년 67.2kg 대비 15.6% (10.5kg) 감소했다. 이는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적은 규모이며, 이를 하루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155.4g 정도가 된다.

이날 밥 한 공기 분량의 쌀 양을 100~150g 정도로 감안할 때 하루 세끼 식사기준 매 끼니당 반 공기 정도를 먹는 셈이다. 앞으로의 쌀 소비 감소량을 예측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전망 2023'에서는 2023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54.4kg으로 예측했으며, 10년 뒤인 2033년에는 44.9kg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침을 거르는 결식률의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한국인의 주식인 쌀 이외의 대체 먹거리가 많아진 현실에서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추세를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쌀은 단순한 먹거리의 한 종류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량 안보와도 직결되며, 대기 정화 및 홍수나 토양 유실 방지 등 벼농사로 인한 환경보전 기능과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시대의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쌀 소비 축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쌀 자체의 소비도 늘려야 하겠지만 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쌀 막걸리, 쌀과자, 쌀케이크 등 많이 알려진 제품 뿐 아니라 다양한 세대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가공식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 쌀가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편리를 지원하고 수출 활성화 정책도 적극 시도해야 한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생산자인 농민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국민들은 쌀 소비 축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 해 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쌀은 우리 삶의 근본이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일한다"라는 말이 있다. 힘이 들 때는 위로의 말로 "밥 먹으러 가자"라고도 한다.

'쌀의 날'을 통해 쌀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社說

감사원이 밝혀야 할 소춘공단 특혜 의혹은

감사원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현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아들 소유의 광주 소춘농공단지(산단) 내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어제부터 사흘 일정으로 광주 광산구청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 성격의 사전 조사를 벌인다.

감사원이 직접 감사에 나선 것은 광주시와 광산구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의 광산구는 박 전 시장 아들의 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자 자체 감사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지난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나선 만큼 특혜 의혹을 날카롭게 밝혀야 한다. 감사원이 밝혀야 할 특혜 의혹은 무엇보다도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다. 박 전 시장 아들은 소춘산단 내 공장용지 부지를 구입한 뒤 광주시와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땅값만 22억 원이 상승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감사의 핵심이다.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를 밝히면 자연스럽게 광주시와 광산구 관련 공무원의 개인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박 전 시장 아들은 2018년 해당 용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에 규정된 관리기관의 신고·승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자치단체장의 오더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관련 공무원의 목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광주시에 광산구로 용도변경 승인을 넘기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어떻게 특혜를 줬는지도 꼼꼼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 광주시 업무 담당자는 용도 변경에 반대했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유출하고 이를 핑계로 심의위원 전원을 교체해 광산구에 넘겼고 광산구는 자기 사람들로 자문위원회를 꾸려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이번 사건은 도심 산단의 땅값 상승을 노린 토호의 전형적인 투기 사례다.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로 특혜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를 통해 일벌백제로 삼아야 한다.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이젠 회사측이 답해야

광주시에 광산구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지 관심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합평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공장 이전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먼저 공장을 비워야 하지만 금호타이어 측이 성실한 이전 추진 의사를 보이면 최대한 이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그동안 공업지역인 공장 부지 용도를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이전 비용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1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비용을 마련할 길이 마땅히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 시장은 지난 14일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이전을 위해서는 공장 가동을 멈춰야 용도변경 도장을 찍을 수 있다"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행정절차를 위한 스타트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겠다"는 뜻을 금호타이어 이사장과 합평군수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가 용도변경에 전형적인 입장을 밝힌만큼 이젠 금호타이어 측이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중국 자본인 금호타이어 측이 막대한 매각 자금만 챙기고 신규 투자나 공공기여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은 금호 측은 물론 KTX 송정역역세권을 개발하려는 광주시와 공장 유지에 사활을 건 합평군 모두에게 '윈-윈'이다.

Advertisement for 'Seamoney' (새만금) featuring the slogan '無等鼓' and 'Seamoney' text. It includes a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gional office.

기고



국민호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매년 8월 18일은 '쌀의 날'이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줄어든 쌀 소비를 늘리고, 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다. 많은 날 중에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정한 이유는 쌀 미(米)를 풀어내면, '八(8), 十(10), 八(8)'이 되는 것에 착안했으며,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선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농부의 손길이 여든여덟 번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어렸을 적 공기에 밥을 남기면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쌀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귀한데 이걸 남기냐며 끝까지 먹게끔 하셨다. 그만큼 농부의 고생과 쌀의 소중함을 알려 주셨던 것 같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었다. 통계청이 올해 1월 17일 발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gional office including phone, fax, and email addresses.